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CRC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3 - 217호

의 안 명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

대상기관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의 결 일 2023. 2. 13.

주 문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2월 13일

위원장 전현희

위원 안성욱

위원 김태규

위원 정승윤

위원 박상희

위원 박홍규

위원 임성문

위원 방이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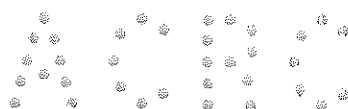
위원 손난주

위원 강길연

위원 최정목

위원 송현주

위원 홍세욱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

2023. 2.



국민권익위원회

ACRC

❏ 목 차 ❏

I. 추진배경	1
II. 제도현황	2
III. 문제점	5
1. 무연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확인 체계 미흡	5
2. 무연고 국가유공자 무연고실 안치	6
3. 국가유공자 무연고 사망 시 예우 부족	7
4. 심리재활서비스 운영 미흡	8
IV. 개선방안	11
1. 무연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확인 체계 강화	11
2. 국가유공자 무연고실 안치 금지	12
3. 국가유공자 무연고 사망 시 예우 강화	12
4. 심리재활서비스 개선 등	13
V. 조치사항	14
[붙임] 관련 법령	15

I. 추진 배경

-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109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110번)

□ 추진 배경

- 지방자치단체는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지 않음

※ 지자체의 국가유공자 확인 소홀로 '18년 이후 사망 당시 국립묘지 안장심사를 받지 못한 무연고 국가유공자 총 49명 발생

- 무연고 국가유공자로 확인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심사 절차 진행되나, 범죄 경력 등으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는 경우 무연고실에 안치

- 무연고실은 문서고, 창고와 같은 구조로 선반 위에 유골을 보관. 일반 봉안시설과 분리되어 지하에 있는 등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22.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국가보훈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으나, 보훈단체에 장례 관련 협력 요청 등 적극적인 역할은 미흡

- 국가보훈처는 '18년부터 보훈대상자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실적* 및 인프라 등에서 운영 미흡

* '21년 기준 전체 국가보훈대상자수 대비 이용률 약 0.24%에 불과

□ 추진 일정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22. 10. ~ 23. 1.
- 관계기관 협의 및 위원회 의결 : '23. 1. ~ 2.

II. 제도 현황

□ 무연고 사망자 현황

- (정의) 무연고 사망자는 ① 연고자가 없거나, ②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③ 연고자가 인수 거부·기피한 시신으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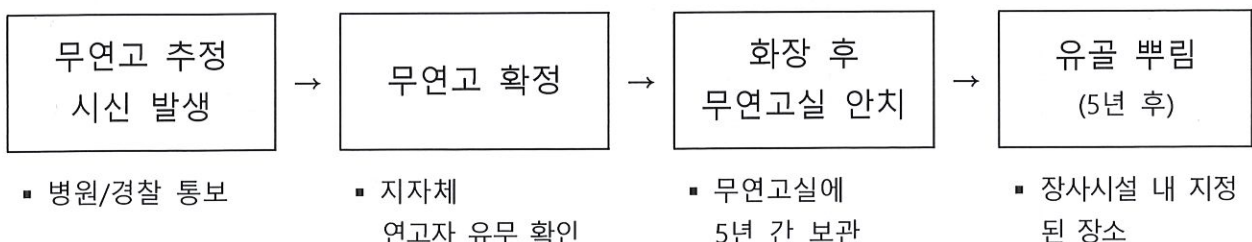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장사업무 안내(보건복지부 매뉴얼)에 규정

- (발생현황) '18년 2,447명 → '19년 2,656명 → '20년 3,136명 → '21년 3,603명 → '22년(6월 기준) 2,314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

<시도별 무연고 시신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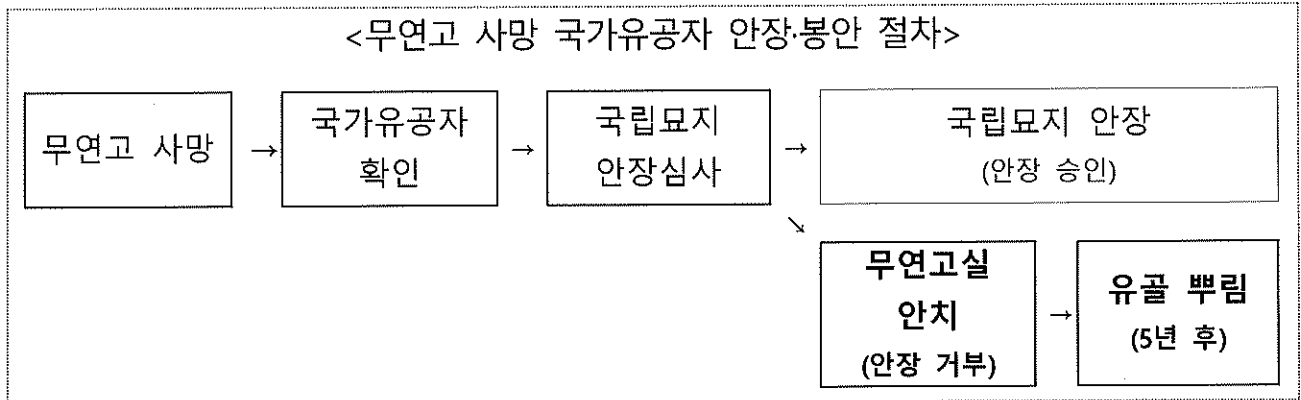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월
계	2,447	2,656	3,136	3,603	2,314
경기	453	615	684	828	486
서울	566	531	670	814	569
부산	221	245	345	399	280
인천	170	206	253	256	182
경남	137	162	163	218	129
대구	134	155	189	201	112
경북	118	110	139	128	51
충남	123	131	91	116	114
강원	128	76	73	115	78
충북	87	82	109	112	44
전남	53	67	94	92	49
대전	78	90	79	87	65
전북	63	59	70	80	48
제주	46	48	72	61	55
울산	39	49	67	60	43
광주	21	23	30	26	4
세종	10	7	8	10	5

○ 무연고 시신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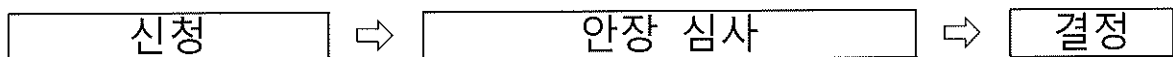
□ 무연고 국가유공자 시신 처리

- 지자체는 무연고 시신 발생 시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해야 하고, 국가유공자인 경우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안내)
- 지방보훈(지)청이 국립묘지 안장 신청, 안장 승인 시 국립묘지에 안장, 미승인 시 지자체 무연고실 안치



□ 무연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 국가유공자 일반에 제공되는 예우인 대통령 명의 근조기, 영구용 태극기 증정, 국립묘지 안장과 더불어 장례서비스 제공
- 국립묘지 안장 절차



- 원칙: 유족 신청 범죄경력 등을 확인, 국립묘지법에
- 무연고 보훈관서 신청 따른 자격 판단

- 장례서비스는 국가보훈처가 계약한 장례업체를 통해 고인용품 (수의, 관, 나무 유골함 등), 빈소용품, 인력, 운구차량 등 지원
- '22년 1월 ~ 10월까지 23명의 무연고 사망 국가유공자 장례 절차에서 서비스 제공하고 1명당 약 148만원, 합계 약 3,400만원을 지원
- ※ 장례서비스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만 제공하였으나, '22년부터 무연고 사망 시에도 확대

□ 국가유공자 등 심리재활 서비스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유가족의 우울증, 대인기피, 사회적리 등 심리적 문제 대응 및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18년 7월부터 시행

- (관련 법령) 국가보훈처장에게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 마련 및 사업 수행 의무 부과(국가유공자법 제44조의2 외 7개 법률*)

*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제대군인법

- (내용) 개인상담(1:1 심리상담), 심리검사(기본적인 정신건강 상태 및 개인상담의 효과성 평가), 집단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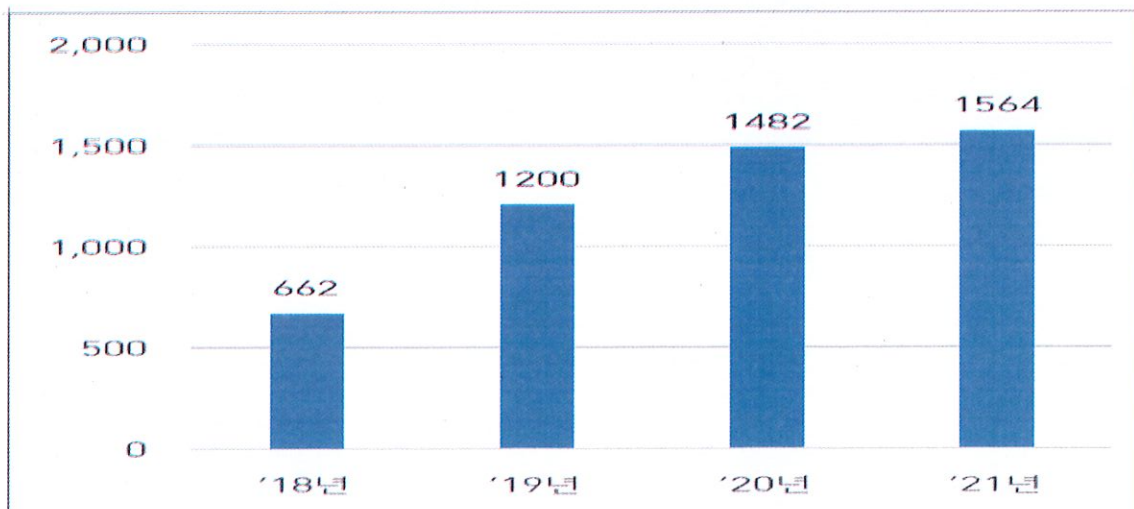
* 명상 교육, 아로마 비누 만들기, 시(詩)치료, 산림청 연계 산림치유캠프 등

- (운영 조직) 서울집중센터(서울 여의도) 및 5개 지방 보훈관서(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에 총 15명의 심리재활 상담사 배치

※ 서울집중센터 센터장 포함 5명, 지방보훈관서 각 2명

○ (지원실적) '19년에 전년 대비 대상 인원과 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한 이후로는 작년까지 매년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

<연도별 심리재활서비스 이용 인원 추이>



Ⅲ. 문제점

1

무연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확인 체계 미흡

□ 지자체의 국가유공자 확인 의무 소홀

-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인지를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지 않음

•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고, 국가유공자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문서로 통보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장사업무안내(보건복지부 매뉴얼)]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기초 226개, 제주·세종 2개) 중 105곳(46%)에서 무연고 사망 시 지방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았음

• 국가유공자 여부 확인의무가 법령이 아닌 보건복지부 매뉴얼인 장사업무 안내에 기재되어 있어 지자체 담당자가 지방보훈청에 확인해야 하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음('22.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지자체의 확인 소홀로 무연고 국가유공자 누락 발생

- 지자체의 국가유공자 확인 소홀로 '18년 이후 누락된 무연고 국가유공자 총 49명 발생

<누락된 무연고 국가유공자 수('22년 8월 국가보훈처 조사결과)>

구분	합계	'18	'19	'20	'21	'22
수	49명	13명	10명	9명	12명	5명

※ 위 누락된 무연고 국가유공자 49명 중 31명은 국립묘지 안장 결정되었으나 17명은 범죄경력 등으로 안장 거부, 1명은 심사 중('22. 12월 권익위 실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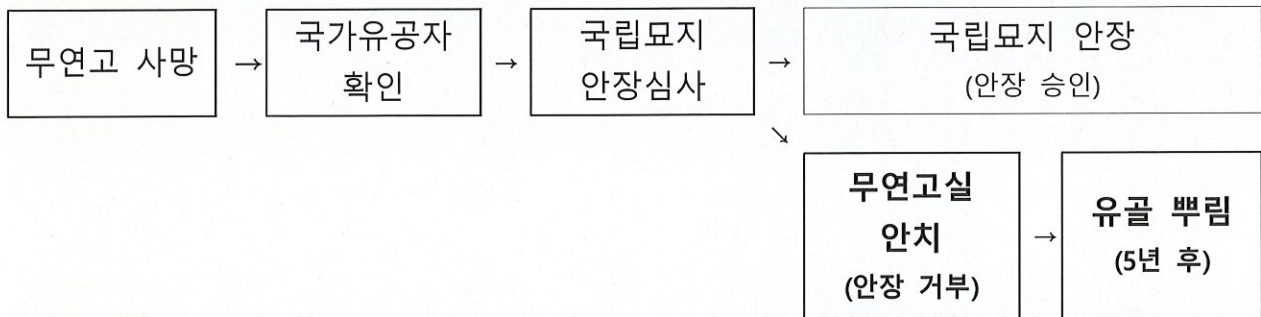
2 무연고 국가유공자 무연고실 안치

□ 국립묘지 안장 거부 시 무연고실 안치

- 무연고 국가유공자로 확인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심사 절차 진행되나, 범죄 경력 등으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는 경우 무연고실에 안치

※ 무연고실에 5년간 보관 후 장사시설 내에 뿌려지고, 다른 유골과 혼합됨

<무연고 사망 국가유공자 안장·봉안 절차>



□ 추모 공간이 아닌 무연고실 안치

- 지자체 무연고실은 단순히 유골을 보관하기 위한 구조로 고인에 대한 추모 또는 애도의 공간으로 보기 부적절

- 문서고 또는 창고와 같은 구조로 선반 위에 유골을 보관. 일반 봉안시설과 분리되어 지하에 있는 등 접근이 어렵고,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22.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시 무연고실 사진



□ 장례 시 국가보훈처의 적극적 역할 미흡

- 국가보훈처는 지자체 무연고 시신 처리 과정 중 장례서비스업체에 연계하는 역할만 수행
 - 국가보훈처가 장례절차의 주체가 되어 장례를 진행하고 추모의식을 진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 예우 필요
- 무연고 사망 국가유공자 장례절차에서 관련 보훈단체 등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부고 및 장례 일정 등을 관련 보훈단체 등에 알리는 절차가 없어 장례 참여 곤란

•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 시 장례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장례서비스 제공만으로 예우가 충분하지 않으며, 부고 및 장례 일정 등의 공고가 필요
(21.8월 국민신문고)

□ 봉안 관련 국가보훈처의 적극적 역할 소홀

- 국립묘지 안장 거부로 장례 이후에도 유골이 무연고실에 안치되는 경우, 통상 5년간 보관 후 장사시설 내에 뿌려져 다른 유골과 혼합
 -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 유골을 일반 봉안시설에 봉안하여 장기간 추모하는 등 예우 필요

※ 일반 봉안실에 봉안되는 경우 일반인도 자유롭게 추모할 수 있음

□ 심리재활서비스 이용률 저조

○ 심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가 전체 국가보훈대상자 수 대비 **0.24%**임

※ '21년 국가보훈처 등록 전체 국가보훈대상자 실인원수 665,489명(기관 홈페이지 통계자료) 중 1,564명(이용률 : 약 0.24%)만 이용

□ 심리재활서비스 인프라 열악

○ 전체 보훈대상자 규모('22년 11월, 약 66만 명)를 감안하면 15명의 심리 재활 상담사(서울 5명, 지방 10명)만으로 충분한 서비스 제공 곤란

○ 서울집중센터는 상대적으로 적절한 상담 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지방보훈관서는 상담 공간이 열악하여 부적합한 서비스 환경

※ 각 심리재활센터 상담 환경 비교('22.11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구분	서울집중센터	지방 심리재활센터
근무장소 (행정업무)	- 보훈관서(서울지방보훈청)로부터 독립된 장소에서 근무 - 행정업무 공간과 상담 공간이 분리	- 광주, 대전의 경우 민원업무창구 안에서 함께 근무 - 대구의 경우 독립된 장소에서 근무하지만 행정업무 공간과 상담업무 공간이 미분리
상담실 등 상담 공간	- 개인 상담실 2개 - 대형 교육실(15명 정도 프로그램 진행 가능) - 소규모 교육실(4~5명 정도 프로그램 진행 가능)	- 인천의 경우 상담실이 없고, 청사 내 일반 회의실을 상담실로 사용 - 부산의 경우 상담실이 있으나, 다른 용도로도 자주 사용 - 모든 지방 관서의 상담실이 1개로, 2명의 상담사가 동시 상담 불가능 ※ 상담내용 비밀유지가 요구되어 상담사 1인이 상담실 사용 시 다른 상담사는 전화상담도 할 수 없고 행정업무만 수행

□ 심리재활서비스 온라인 홍보 및 정보제공 기능 미흡

- 현재 국가보훈처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심리재활서비스 관련 정보는 내용이 부족하여 홍보 및 인지도 제고에 부적합
- 개략적인 프로그램 소개, 상담전화번호 및 센터 위치 안내에 그치고 있어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적인 정보 제공 필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심리재활서비스 안내>

The screenshot shows the official website of the National Remembrance Service (국가보훈처).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About Us', 'Services', 'Contact Us', and '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심리재활서비스) and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service, including the department (보훈의료과), contact number (044-202-5643), and a list of services (e.g., counseling, medical services, etc.). There is also a section for '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심리재활서비스) with a download link for a PDF document.

※ 국가트라우마센터의 경우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법령, 재난 정신건강 정보, 자가진단, 안정화기법 등 심리치료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제공

국가보훈처 설문조사 시 심리재활서비스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7.5%인데, 인지 경로가 나라사랑신문이 46.2%인 반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는 23.1%에 불과 ('22년 11월 국가보훈처 제출 자료)

□ 심리상담 위주 프로그램의 한계 존재

- 현행 심리상담 위주의 프로그램은 진로, 취업 등 그와 관계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보훈대상자에게 효과가 제한적임
- 심리상담과 함께 보훈대상자 중 비슷한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소통하는 지지모임 또는 자조 집단에 대한 지원 필요

※ 국가보훈처 설문조사 결과 보훈대상자의 74.5%가 지지모임 또는 자조집단이 필요하다고 응답('22년 11월)

- 미국은 순직자의 배우자, 자녀, 형제 등 비슷한 관계의 사람들끼리 그룹을 형성하여 공감소통을 통해 스스로 치유 지원(동아일보, '22.8.13.)
- 순직 소방관 유가족 모임에서 배우자 및 자녀 등이 낯선 상황에서도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치유되는 느낌 경험(동아일보, '22.8.11.)

IV. 개선방안

1 무연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확인 체계 강화

□ 무연고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확인 시스템 마련

- 무연고자 처리 과정에서 지자체 장사업무 담당자가 국가유공자 여부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현행 지자체 행정업무 포탈시스템(서울행정시스템)에 구축된 국가유공자 현황을 지자체 장사업무 담당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국가보훈처] 지자체 행정업무 포탈시스템 개선

- 지자체 장사 업무 처리 시스템상 무연고자 등록 시 국가유공자 확인 여부를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시스템 개선

⇒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처리 시스템 개선

□ 국가유공자 확인 협조 체계 강화

- 지자체에 정기적으로 무연고 시신 처리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업무절차 마련

※ 지자체에 지속적인 주의 환기, 담당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 가능성 방지

⇒ [국가보훈처] 정기적으로 지자체에 국가유공자 확인을 독려하는 업무절차 마련

2 국가유공자 무연고실 안치 금지

□ 무연고 국가유공자 무연고실 안치 금지 규정 마련

- 장사업무 안내(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거부 시 무연고실 안치 금지, 일반 봉안실 등에 봉안 가능하도록 규정

※ 일반 봉안실에 봉안되는 경우 일반인도 자유롭게 추모

⇒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안내 등 관련 규정 개정

3 국가유공자 무연고 사망 시 예우 강화

□ 장례 절차 시 국가보훈처의 적극적 역할 강화

-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 시 지방보훈(지)청에서 관련 보훈단체 등에 부고와 일정 등을 알려 참여를 요청하는 등 예우 강화 방안 마련

※ 장례지도사 등 장례업체 관계자만 참여하는 장례에 그치지 않고, 보훈단체 회원 등에게도 참여 기회 부여

⇒ [국가보훈처] 관련 보훈단체 등에 부고와 일정 등을 알려 참여를 요청하는 등 예우 강화 규정 마련

□ 심리재활서비스 인프라 및 온라인 홍보 개선

- 독립적인 전용 상담실 등 적절한 상담환경 마련 등 인프라 개선 방안,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홍보수단 마련

⇒ [국가보훈처] 심리 상담실 환경 및 온라인 홍보 수단 등 개선방안 마련

□ 보훈대상자 지지모임(자조조직) 지원 프로그램 개발(정책제안)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심리적 치유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자조 집단 프로그램을 도입

V.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과제구분	세부과제	관련법령등	대상기관	조치기한
① 국가유공자 무연고 사망 시 확인체계 강화	○ 무연고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확인 온라인 시스템 개선 - 지자체 장사업무 담당자가 국가 유공자 여부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무연고 시신 처리 시 국가유공자 확인 필수 입력하도록 장사업무 시스템 개선	업무시스템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23. 12.
	○ 주기적으로 지자체에 국가유공자 확인을 독려하는 업무절차 마련	업무지침	국가보훈처	'23. 6.
② 국가유공자 무연고실 안치 금지	○ 무연고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거부 시 일반 봉안실 등에 봉안 가능하도록 규정	업무지침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23. 12.
③ 국가유공자 무연고 사망 시 예우 강화	○ 관련 보훈단체 등에 부고 및 일정을 알려 참여를 요청하는 등 예우 강화 방안 마련	업무지침	국가보훈처	'23. 12.
④ 심리재활 서비스 개선	○ 심리 상담실 환경 및 온라인 홍보 수단 등 개선 방안 마련	업무지침	국가보훈처	'24.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략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항제1호다목의 사람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명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안장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중 대통령 외의 사람 및 같은 호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묘의 면적 결정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한다)
- 2의2.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와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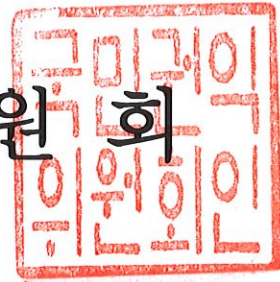
※ 독립유공자법 등 7개 법령에 위 국가유공자법 및 시행령과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 보훈유형을 특정한 것 외에는 거의 같은 내용으로서 구체적 열거는 생략함

-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4
-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7
-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6
- ④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2
- 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
- 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3
- ⑦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4

정 본 입 니 다 .

2023. 2. 17.

국 민 권 의 위 원 회



ACRC